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34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(주)우리은행

2. 조치내용

- ☐ (금감원 원안)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,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,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, 거짓자료 제출 등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 기준 미준수,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 「은행법」 위반에 대하여 (주)우리은행에 과태료 177,000,000원, 과징금 271,454,469원을 부과하고, 대림3동지점*, 동탄역금융센터*, 오리역지점*, 은평뉴타운지점*, 을지로5가금융센터**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조치

* 정지대상 업무: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(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)

** 정지대상 업무 : 외국환 지급·수령 신규업무(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·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·수령은 제외)

- ☐ (수정의결)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대림3동지점, 동탄역금융센터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갈음

제재대상	원안	수정안
(주)우리은행	과태료 177,000,000원 부과 과징금 271,454,469원 ¹⁾ 부과	과태료 177,000,000원 부과 과징금 308,843,811원 ²⁾ 부과
대림3동지점	업무의 일부정지 ³⁾ 6개월	과징금 부과(19,464,886원)
동탄역금융센터	업무의 일부정지 ³⁾ 6개월	과징금 부과(17,924,456원)
오리역지점	업무의 일부정지 ³⁾ 6개월	좌동

은평뉴타운지점	업무의 일부정지 ³⁾ 6개월	좌동
을지로5가 금융센터	업무의 일부정지 ⁴⁾ 6개월	좌동

- 1) 우리은행 13개 영업소가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
- 2)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대림3동지점, 동탄역금융센터를 포함한 우리은행 15개 영업소가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
- 3) 정지대상 업무: 외국환 신규 지급업무(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)
- 4) 정지대상 업무: 외국환 지급·수령 신규 업무(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·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·수령은 제외)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) 외국환거래법 위반

(1)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

- ☐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6조 제3호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5-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 제1항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·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- ☐ (주)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5개 영업소는 2021.9.7.~2022.8.23. 기간 중 거주자인 (주)○○ 등 5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(40건, 미화 9,098,331불)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
- (주)○○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

(2)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

- ☐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4호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“증빙서류”)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- ☐ (주)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12개 영업소는 2021.4.12.~2022.6.14.기간 중 (주)○○ 등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(398건, 미화 538,220,969불)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,
 -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,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 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

(3)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

- ☐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1호, 제4호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,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(2018.12.24. 이전에는 미화 2만불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,
- ☐ (주)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18개 영업소는 2018.1.1.~2022.6.30.기간 중 대외지급·수령한 보관대상 서류 191,983건중 11,588건(6.0%)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(4)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 제출

- ☐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,

- (주)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3개 영업소는 검사실시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일자,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총 23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

2) 은행법 위반

(1)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

- 「은행법」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*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,

* 은행 임직원의 사기·횡령·배임·절도·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

- (주)우리은행 내규 「사고예방업무지침」 제3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,

- (주)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前지점장 ▲▲▲은 2021.10.21.~2022.6.14. 기간 중 (주)지케이트레이드 등 4개 업체의 송금거래(255건, 미화 329,468,264불)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여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 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*하였고,

* 업체가 송금해야 할 금액(수입대금)을 외화가 아닌 원화 금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거래환율을 먼저 알려주면서 업체의 인보이스상 수입대금 및 수입물품 수량 등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여

- 2022.5.12.~2022.6.13. 기간 중 (주)○○의 송금거래(13건, 미화 12,785,379불)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 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지원 하였으며, 서부영업본부는 은평뉴타운지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前지점장 ▲▲▲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는바,

※ 상기 제재대상사실 관련 업창용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,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(대구지법 2022고단4066, 2023.1.11.)

- 이로인해 (주)우리은행에서는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268건, 342,253,643불(약 4천2백억원 상당)의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하였음

(2)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

- 「은행법」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,
- (주)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2개 영업점은 □□□□(주)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

3) 수정심의 사유

- 위반행위의 양태·위반규모의 중대성 등의 관점에서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에 대한 기존 제재 선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,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만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이외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제6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(업무상의 의무) 제1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제1항 제5호의2, 제7호, 제5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의2(과징금) 제1항, 제2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(보고·검사) 제4항, 제6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2조(과태료) 제4항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 제1호, 제4호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22조(인가의 취소 등), <별표2>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, <별표3>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35조(검사) 제4항 제2호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4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<별표4>
-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 제1항, 제2항, 제4항
-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4-2조(지급등의 절차) 제1항
-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4-3조(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) 제1항 제2호
- 「은행법」 제34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1항 제4호, 제2항
- 「은행법」 제34조의3(금융사고의 예방) 제1항 제1호
- 「은행법」 제69조(과태료) 제1항 제5호의2, 제5호의3
- 「은행법시행령」 제20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) 제5호
- 「은행법시행령」 제20조의3(금융사고 예방대책 등) 제1항 제1호
- 「은행법시행령」 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<별표4>
-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29조의3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2항 제2호